

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

인도네시아 경제 및 환경 정의 실현

2023. 10. 6.(금) 10:30-12:00 (KST), 08:30-10:00 (WIB)

주최: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한 국제NGO포럼(INFID),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(Komnas HAM)

배경

전 세계는 폭력, 기후위기, 경제위기, 민주주의 쇠퇴,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, 에너지 및 식량위기,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던 코로나-19 팬데믹까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.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다.

인도네시아에는 520 여 곳의 지역 및 도시가 있으며,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. 인도네시아 지방정부는, 최근 관심을 받고있는 인권 도시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. 인도네시아 내에서 인권도시운동은 인도네시아 개발에 관한 국제 NGO 포럼(INFID)이 인권도시 컨퍼런스를 주도한 2014년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. 당시, INFID는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(Komnas HAM)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었다. 특히, 지방정부 수준의 인권증진 및 실현과정에서 모범 사례 및 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, 이후 지방정부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발전했다.

2018년 이래, 당시 개최되었던 우노소보 구의 제안으로, 인권도시 컨퍼런스는 회의 및 문화행사를 모두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했다. 이후, 인권 페스티벌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9년 젬버, 2020년 반자르마신, 2021년 세마랑, 2022년 자카르타에서 매년 개최된 바 있으며, 올해 행사는 서 칼리만탄의 싱카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인권도시 개념의 확산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, INFID 및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정부를 위한 인권 도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.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50곳 이상의 도시에서 제공되었으며, 올해는 파푸아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. 파푸아 지역은 인도네시아 최빈지역으로 전체인구의 26.8%인 936,000명이 빈곤 문제에 처해있다. 인도네시아 내 불평등의 주요인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, 구조적인 요인에서부터 세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.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장을 달성한 후,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시장 근본주의가 도입되었다. 하지만 성장의 결과의 많은 혜택이 소수의 상위그룹에만 돌아갔다. 그 결과, 부를 통



해 영향력을 획득한 소수의 상위그룹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,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나 법을 바꾸려고 하면서 정치적인 횡포로 이어졌다.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 중 하나인 양성평등은, 가장 오래된 형태의 불평등 중 하나로,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만연해있으며,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(OXFAM Briefing, *Toward a More Equal Indonesia*, 2017).

빈곤과 불평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, 도시인권 및 연대를 위협한다. 따라서, 인권도시의 최우선 과제는 빈곤 및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인권문제를 인식하고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.

인도네시아 각 지역 및 도시는 더욱 정의롭고 평등한 도시를 위해 빈곤 및 불평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, 모범사례 및 교훈을 얻고 있다. 특히, 2023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불평등 및 빈곤 해결과정에서 배운 모범사례 및 교훈을 논의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.

목표

1. 정의롭고 평등한 경제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경험을 선보인다.
2. 중앙정부, 지방정부,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빈곤 및 불평등을 해결하며 얻은 경험, 모범사례 및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.
3. 빈곤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다른 도시 사례로부터 모범 사례 및 교훈을 얻는다.
4. 지방정부 수준에서 인권을 존중하고, 보호하고,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보여준다.

중점 논의사항

1. 정의롭고 평등한 경제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정책
2. 정의롭고 평등한 경제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의 권고사항

